

# 뉴스 레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리더칼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

## 이슈진단

- 스마트 건설 생산시스템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 하도급지급보증 면제조항 폐지, 그 의미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고령 건설근로자 활용 필요성

## 연구원소식

- “건설산업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 2020년도 기획과제 연구자문회의 개최
- 주거복지포럼,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토론회 참여
- 전남도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제
- 제5회 RICON 토론회 개최
-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통계청,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대한토목학회, KSCE 2019 convention 참석, 발제
-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 발간물안내

- 전문건설업 효율성 분석 연구
- 건설업체 한계기업 동향분석 및 특징에 관한 연구

TEL.(02)3284-2600(대)

FAX.(02)3284-2620

http://www.ricon.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

## “건설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결고리이자 사다리”

한국 건설산업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200만 명 이상의 건설인력과 약 6만 여개의 업체가 활동하는 국가 중요 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 생산성은 지난 수십 년 간 정체되어 선진국의 1/2~1/3 수준에 불과하며, 타 산업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 규모의 정체와 해외건설 축소 등의 문제와 더불어 4차산업 혁명도래, 국민중심으로의 수요 변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도 향후 건설산업이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건설산업이 직면하는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로 멕킨지(2017년)는 전통적인 습식 건설생산에서 건식으로의 전환, 인력에서 기계화·자동화로의 이전 등 건설현장 기술혁신이 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매우 필요한 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1930년대 초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우리 건설사가 시공한 국내 초고층 건축물 건설, 세계 최고 높이의 브루즈 칼리파 빌딩의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강조한 멕킨지의 제안 내용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국내 시설물 건설에 적용된 수많은 핵심기술이 외국 건설기술이라는 점은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기술개발 투자비는 국내 총생산의 4.5%에 해당되는 20.5조원으로 세계 최고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특허 등록 수도 특허 제도가 시작된 지 70여년 만에 200만호를 기록하였고, 건설부문 특허 역시 연간 6,000여건에 달하는 등 기술개발의 중요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투자 및 특허의 확대가 실제로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건설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

민간 기술개발 촉진, 생산성 향상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미 30여 년 전에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신기술지정제도 하에서 약 850여개의 기술이 신기술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일회성인 건설사업 특성과 신기술의 제한된 인정기간으로 인해 약 180여개 신기술만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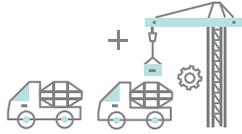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신기술은 4,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총 1만여 건 공사의 50%인 5천 건 공사에서 연간 2만여 건의 건설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신기술은 공공 및 민간의 건설사업 총 수는 7만여 개에 달하나, 약 180건의 신기술만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건수도 2천여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설 신기술의 실제 적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물 방수 재료나 공법, 장대 교량의 구조물 공법 등 건설기술은 매우 다양하고 규모에 따른 적용 방법도 각기 다르나, 모든 기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제도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가 특허 등 여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입찰 평가 시 동일 또는 거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현행 입·낙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는 것도 요구된다.

건설신기술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기술개발의 성과물이자 실용화 및 사업화까지 결과물로서, 국민, 정부, 수주자 측면의 기술개발의 연결고리이자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건설신기술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요소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이 기술중심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때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다양화, 변별력 확대 및 지정 신기술의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 건설 생산시스템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 (skpark@ricon.re.kr)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등의 첨단 건설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히 연구되고 시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인식 아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 주거환경의 구축을 통한 공간복지의 실현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스마트 건설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국토·주거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나, 더불어 건설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스마트 건설 생산 시스템의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은 지난 50년간 생산성이 하락한 유일한 산업분야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 간 건설을 제외한 비 농업분야의 생산성은 연평균 1.9%씩 증가하였지만 건설 부문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4%로 건설 부문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에 대비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조사 대상 국가 41개국 중 40위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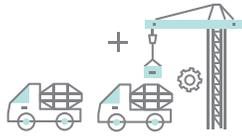
다른 대부분의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화 및 IT 기술에 의한 정보화 혁명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지만, 건설 시공 및 엔지니어링 부문은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 현장 생산 조건과 복잡한 생산방식, 기술 인력의 노령화, 표준화된 지식체계 구축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설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첨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건설 프로젝트의 단기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건설생산 체계상 표준화의 어려움,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설계사 시공사 자재 및 장비 업자 등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어려운 조달구조, 보수적인 건설산업의 문화에 첨단기술과 인재의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건설산업은 단위 프로젝트의 기간과 비용이 비교적 매우 크며, 다른 산업 분야보다 스마트 ICT 기술을 통한 생산성의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를 통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첨단 ICT 기술의 접목이 어려운 산업 구조이나 스마트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산업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건설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과 같은 스마트 ICT 핵심 기술들을 건설산업에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으로 고도화 시켜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스마트 건설생산과 관련된 요소기술들과 건설산업과의 접목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그 성장 잠재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스마트 건설생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전략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조항 폐지, 그 의미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 (jglee@ricon.re.kr)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지난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곧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이해된다. 건설산업의 하도급계약 관행과 공정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원도급업체는 자신이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과 같은 제3자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보증서를 교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는 회사채 신용등급 A0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나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보증 면제되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효과로 먼저, 하도급대금 지불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지급보증 의무화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급보증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상으로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하도급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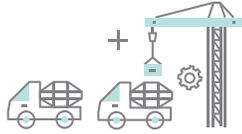
개정으로 기대하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하도급공사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도 하도급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기업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은 개별기업의 내부 사정이나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고, 그 영향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조항 개선으로 건설공사 자금흐름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해당 공사의 완성도 제고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기업경영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외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재, 장비공급업자와 현장 근로자 등 모든 건설생산 참여자들이 대금이나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게 된다.

앞으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신용등급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보증에 따른 부담이 다수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전반에서 건설생산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경제의 수준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령 건설근로자 활용 필요성



▣ 박 광 배 연구위원 (jwjb2021@ricon.re.kr)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총인구는 2027년 5,193만명으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인구성장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7년에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7년 국내 총 인구는 3,013만명, 인구성장률은 2.34%였다. 2017년에는 5,136만명으로 50년만에 2,123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인구성장률은 0.2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50년 뒤인 2067년에는 국내 총인구가 3,929만명으로 감소하고 인구성장률은 -1.26%가 예상된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급격하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야기한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양상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무인화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다.

그러나 기계화와 무인화가 모든 노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노동력 부족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은 노동의존도가 강한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도 과거에 비해 기계화의 비중이 높아졌고,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성이 강한 산출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이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은 생산요소인 노동의 사용에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한국의 건설근로자들이 외국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했던 것처럼 경제발전 단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의 젊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성은 일정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은 이민정책과 연계돼 있고, 특히 한국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노동의 이동성은 더욱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생산요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2.32%인 1,159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인구는 감소가 지속되지만, 2037년 고령인구는 1,879만명으로(전체 대비 36.57%)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명 중 36명이 65세 이상인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18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근로자로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다. 이미 건설업은 연령대가 높은 근로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고령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시점이다. 근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 및 자재의 개발로 근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현장경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고령의 건설근로자는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19.09.18)

- ■ 지난 9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동 토론회는 국내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코자 마련된 자리이다.
- ■ 동 토론회에 우리 연구원의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여러가지 규제가 일시에 부과되어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2020년도 기획과제 연구자문회의 개최(19.09.20)

- ■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2020년도 기획과제 및 협력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 동 회의에는 김재정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 채미옥 대구대학교 초빙교수(前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 우리 연구원은 자문회의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건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 주거복지포럼,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토론회 참여(19.09.25)

- ■ 유병권 원장은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주거복지포럼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회 진행을 이끌었다.
- ■ 동 토론회에서는 공익적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전남도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제(19.10.01)

-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 10월 1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2019년 지역 건설산업 발전 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 동 행사는 토목기술발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남도과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함께 동참했다.

## 제5차 RICON 토론회 개최(19.10.04)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4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글로벌 도시부동산 트렌드”라는 주제로 박병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무이사를 강연자로 모셔 「제5차 RICON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동 토론회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민간부동산의 인프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도시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 우리 연구원은 건설업 주요 현안 및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토론활동을 통해 산학연관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RICON 토론회」를 신설하여 매월 2회 개최하고 있다.



##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9.10.16)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연구” 용역과제를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동 과제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발주한 연구과제로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유일한 연구위원, 조재용 선임연구원, 정대운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지난 10개월간(18.11~19.09) 수행하였다.
- 본 연구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기후여건 변화(미세먼지, 폭염 등) 및 종사여건 변화(레미콘 휴무제, 민원, 파업 등)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의 현실화와 토복공사 및 마감공사 기간과 공사 준비 및 마무리 기간의 합리화를 통해 LH 주택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 통계청,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이 통계청의 “제5기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 통계청은 경제분류의 체계적인 개정 및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동 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경제부분 통계분류 및 개발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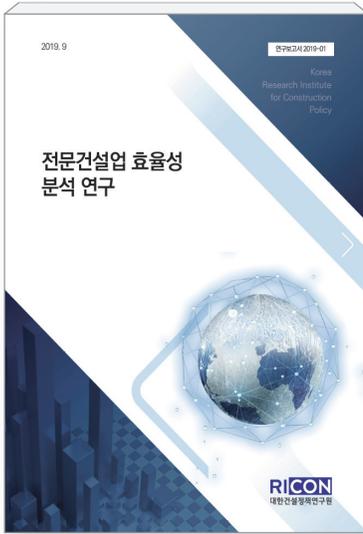
## 대한토목학회, KSCE 2019 convention 참석, 발제

- 지난 10월 17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대한토목학회의 2019년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은 전문연구세션에 참가하여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 동 발제에서 홍성호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일본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행동계획, 개발시설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노후 인프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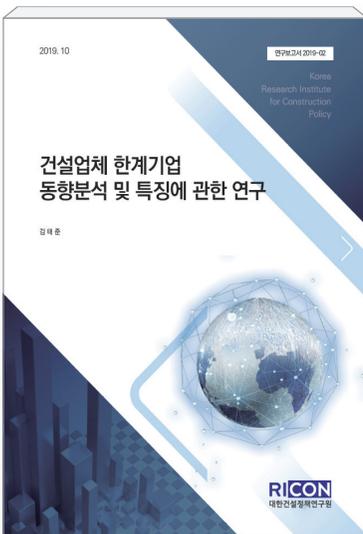
##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 박광배 연구위원, 이보라 연구위원, 홍성진 책임연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 동 자문단은 앞으로 개별자문과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하도급 분야에서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및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 「전문건설업 효율성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업 외감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효율성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연구는 전문건설 기업의 유형별, 업종별, 규모별 효율성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결과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건설업 효율성은 유형별로 시설물축조 및 해체 전문공사업, 기업규모별로 대형기업, 업종보유수는 2개일 때, 세부 업종별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각각 가장 높은 효율성 값을 보임.
  - 건축중심 전문건설 업종이 토목중심 전문건설 업종에 비해 효율성이 비교적 높게 분석됨.
  - 전문건설업 효율성은 건설경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을 때는 효율성 값이 높고, 수축국면에서는 낮은 효율성 값을 나타냄.
  - 전문건설업 효율성과 성장률은 그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타 기업, 타 업종 등과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건설업체 한계기업 동향분석 및 특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우리 연구원은 건설업체 중 외부감사대상 총 1,930개사의 최근 5개년 동 한계기업분석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외감기업 업체 수는 2014년(1,624개)부터 2017년(1,876개)까지 증가하다 2018년 소폭 감소(1,833개사)
  - 건설업 순이익률은 2014년 -0.2%에서 2017년 4.1%까지 회복한 후 2018년에 0.2%p 감소하여 3.9%로 하락하며, 수익성이 감소.
  - 평균 매출액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3%, 2017년에는 8.5% 각각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0.3%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
- 이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이며,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율(14.2%)보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16.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건설업체 중심으로 경영부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에도 우리 연구원은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한계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